<한국제도·경제학회 Working Paper Series, KIEAWP 2018-1>

양당제 하에서의 정치적 편향성과 정책 편향성:
중위 정책, 포퓰리즘 정책, 보복 정책, 평균 정책의 비교

Political Bias and Policy Bias under Two-Party System:
Mapping voters' discrimination into biased policy via median policy, populist policy, retaliatory policy and mean policy

이상학
(국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이성규
(국립안동대학교 무역학과)

2018. 5.

한국제도·경제학회

양당제 하에서의 정치적 편향성과 정책 편향성:
중위 정책, 포퓰리즘 정책, 보복 정책, 평균 정책의 비교

이상학[1], 이성규[2]

<목 차>

I. 서론
II. 정치적 편향성과 정책 편향성 분석: 기본 모형
III. 기본 모형의 확장: 비선형 후생 손실과 일반적 유권자 분포
IV. 유권자의 체계적 편향성과 정책 선호
V. 결론

<한글초록>

양당제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두 정당이 집권을 위해 경쟁한다. 선거에서 승리하여 집권한 정당은 자신의 정치 이념에 부합하면서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수립·집행한다. 이에 따라 집권 정당이 바뀌면 정책도 바뀐다. 또한 집권 정당은 지지자들과 비(非)지지자들을 '차별'하려는 유인을 가진다. 집권 정당은 지지자들을 편애하지만 비지지자들에게는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보복하려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집권 정당의 유권자 차별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유권자의 차별적 대우와 정책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집권 정당의 유권자 차별의 정도를 모형에 명시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유권자에 대한 정당의 정치적 편향성이 정책 편향성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이론 모형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적 편향성이 클수록 정책 편향성이 크다. 둘째, 유권자 차별화의 정도에 따라 중위 정책, 포퓰리즘 정책, 보복 정책 등에 이르는 다양한 정책 편향성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포용적인(encompassing) 정치인이나 정당의 발생 가능성이 발견된다. 포용적인 정치인(정당)은 유권자들의 후생 손실의 극소화를 위해 중위값보다 '평균값'에 가까운 정책인 '평균 정책'을 선택하려 한다.

핵심 주제어(key words): 양당제, 정치적 편향성, 정책 편향성, 정책 후생, 유권자 차별 유형, 중위투표자 정리, 가중된 후생 손실, 포퓰리즘 정책, 보복 정책, 중위정책, 평균정책, 포용적 정당.

1) 국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E-mail: slee@kookmin.ac.kr.
2) 국립안동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E-mail: skl62@hanmail.net.

I. 서론

대의(代議)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당들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득표 경쟁을 하거나 정책 선택 결정을 한다. 각 정당은 자신의 정강 정책(platform)이나 선거 공약(manifesto)을 제시하고, 유권자들은 이들 정강 정책과 선거 공약을 검토한 후에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정책이나 공약을 제시하는 정당에 투표할 것이다. 이러한 경쟁 과정을 거치면서 정당들이 제시하는 정강 정책이나 공약은 큰 차이 없이 서로 '비슷해지게' 된다. 특히 양당제로 정치체제가 운영되는 대의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정당들의 정책이나 선거 공약이 유사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Downs(1957)는 Hotelling(1929)의 입지 모형(location model)을 양당제 하에서의 선거 경쟁에 적용하여 '중위투표자 정리'(median voter theorem)를 도출하였다. 중위투표자 정리에 의하면 양당제 하에서 두 정당은 득표 극대화를 위해 차별화된 정책이 아니라 각각 중위투표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정책을 선거 공약으로 제시하므로 각 정당의 정책이나 공약이 서로 비슷해 질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러나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실제로 채택하는 정책들은 각 정당의 철학이나 이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중위투표자 정리의 현실 적합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 왔다. 이 뿐만 아니라 중위투표자 정리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중위투표자 정리가 성립하려면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공약을 약속대로 이행한다는 암묵적 가정이 요구된다. 이러한 가정이 현실적으로 충족되는가? 그러한 가정의 현실성 여부에 관해 Alesina(1988)와 Lee, Moretti and Butler(2004) 등이 이론적·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Alesina(1988)는 선거를 1회만 치르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치르는 상황을 분석하였다. 이 경우 두 정당의 정책이 유사해질 가능성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크게 차이가 날 가능성도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Lee, Moretti and Butler(2004)는 미국 하원의 1946~1995년 기간 중 점호투표(roll-call vote) 결과를 이용하여 중위투표자 정리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들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당선자들은 정책 수립 시 자신의 이념이나 철학 등을 수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 '당선자'를 선택할 수는 있지만, 선거 후 당선자가 선택하는 '정책'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중위투표자 정리가 실제로 성립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양당제 하에서 각 정당이 자신의 지지자들과 비(非)지지자들을 "차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정책 편향성'(policy bias)에 대해 이론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양당제 체제에서는 두 정당이 집권을 위해 정책 선택 경쟁을 한다. 경쟁에서 승리하여 집권한 정당은 자신의 정치 철학이나 이념에 기반 하거나 자신의 지지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을 수립·집행한다. 이에 따라 집권 정당이 바뀌면 '정책 변화'가 초래될 것이다. 정책 선택과 관련하여 Alesina(1988)는 정당이 정책 선호(policy preference)를 가지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 결과 각 정당은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정책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각 정당이 이념 지향성은 있으나 정당

지지자들에 대해 포용적(encompassing)이라고 가정한다. 정당들이 선호하는 정책이 고정 불변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집권 후에 유권자들의 후생에 가중치를 주어 합한 총후생을 극대화(또는 가중된 총후생 손실을 극소화)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본 논문은 집권 정당이 자신을 지지하는 유권자들과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을 차별할 유인을 가지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고려한다. 양당제에서 각 정당은 모든 유권자들을 평등하게 대우하지 않고 자신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후생을 증가시키는데 더 큰 관심이 있으며, 자신에 대한 지지의 정도가 떨어지거나 반대하는 유권자들의 후생에 대한 관심이 적을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하고자 한다. 또한 집권 정당은 극단적으로는 비(非)지지자들의 후생을 감소시키려 할 것이다. 즉, 집권에 성공한 정당은 모든 유권자들을 평등하게 대우하기보다는 (i) 자신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편애'하고, (ii) 비지지자들에게는 '무관심'하거나, (iii) 심지어 '보복'할 가능성이 있다. 유권자들에 대한 차별의 정도가 클수록 정책 편향성의 정도도 커질 것이다. 본 논문은 집권 정당의 유권자들에 대한 차별 정도(즉, 정치적 편향성)이 정책 편향성으로 연결되는(mapping) 과정을 이론 모형과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 제II장은 집권 정당의 유권자에 대한 편향성이 정책 편향성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이론적 모형을 수립하여 분석한다. 정당의 유권자들에 대한 차별의 정도를 4가지 경우로 나누고, 각 경우에 정당의 최적 정책 선택 과정에 관해 분석한다. 제III장은 기본 모형을 확장하여 유권자들의 일반적 분포와 2차항의 손실함수를 가정하고, 이 경우 정당이 유권자들의 '중위정책'보다 '평균정책'을 선택하는 과정에 대해 분석한다. 제IV장은 유권자들의 '체계적 편향성'(즉, 비합리성)이 편향된 정책 선호를 초래함을 논의하며, 제V장은 본 논문의 결론을 제시한다.

II. 정치적 편향성과 정책 편향성 분석: 기본 모형

대의(代議)민주주의 체제에서 선거를 통해 집권한 정당은 정책을 수립하여 집행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이때 집권당이 선택하는 정책은 정강 정책이나 선거 공약과 일치하는가? 정치적 경기순환론(political business cycle)이나 정치인들의 시간적 비일관성(time inconsistency) 이론에 따르면 선거 공약과 정강 정책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Alesina(1988)를 비롯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정당의 정책 선택의 내생성(內生性)이나 편향성(偏向性)에 그다지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자신을 지지한 유권자들의 요구에 영합(迎合)하는 현상인 소위 "포퓰리즘"(populism)의 발생 원인에 대한 설명은 분석적으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당의 정책 결정은 본질적으로 유권자들의 선호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정당의 정책 선택이 유권자들의 '정치적 편향성'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들의 선호와 지지에 영합하는

과정에서 '편향된 정책'이 선택될 것이다.

본 논문은 집권당이 유권자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이들의 요구를 정책 선택에 반영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선거를 통해 집권에 성공한 정당은 모든 유권자들을 평등하게 대우하지 않고 자신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이익과 후생을 증가시키는데 더 큰 관심을 가지며, 다른 한편으로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의 후생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것이다. 극단적으로 정당은 집권 후 보복적으로 자신의 비(非)지지자들의 후생을 감소시키려 할 수도 있다. 즉, 정당은 모든 유권자들을 평등하게 대우하기보다는 자신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좀 더 '편애'하려 하고, 자신의 비(非)지지자들에게는 아예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보복'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논문의 목적은 유권자들의 '정치적 편향성'이 정당의 '정책 편향성'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양당제 하에서 정당이 자신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요구에 부응(영합)하는 정책 선택 과정을 밝히고자 하는 데 있다.

먼저, 분석 모형을 수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가정하기로 한다. 우선, 두 개의 정당이 1차원 선분 [0, 1]상 각각 0과 1에 위치해 있다고 가정한다. 편의상 0에 위치해 있는 정당을 "정당 0"(집권당)이라 부르고 1에 위치에 있는 정당을 "정당 1"(반대당)이라 부르기로 한다. 둘째, 유권자들의 유형은 [0, 1] 구간 내의 위치로 나타내기로 한다. 유권자 유형을 x로 표시하며 유권자들은 [0, 1]의 구간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uniformly distributed)고 가정한다: $x \in [0, 1]$. 셋째, 선거에서 승리하여 집권한 정당은 [0, 1]의 구간에 속하는 정책 b를 선택하여 집행한다. 넷째, [0, 1]의 구간에 분포된 각 유권자에게는 자신의 유형(x)과 정책(b)의 차이로부터 비효용(후생 손실)이 발생하며, 비효용의 크기는 유권자의 유형(x)과 정책(b)의 차이에 비례한다. 즉, 집권당이 제시하는 정책 b가 유권자 x에게 초래하는 비효용은 자신의 유형과 정책 간의 차이인 (x-b)의 선형함수로 주어진다. 구체적으로 b>x이면 유권자의 비효용(후생 손실)은 (b-x)로, b≤x이면 (x-b)로 주어진다. 실제 채택된 정책(b)과 유권자 유형(x)의 차이가 작을수록 유권자의 비효용은 작아질 것이다. 만일 x=b이면 유권자의 비효용(후생 손실)은 0이 된다.

본 논문의 분석은 "정당 0"(편의상 '집권당')의 경우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정당 0'에 대한 분석 결과는 "정당 1"에게 대칭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정당 0은 유권자들을 다음과 같이 '차별'한다. 정당 0은 유권자 x에 대해 (1-**a**x)의 가중치를 부여하는데, 여기서 **a**는 유권자 차별의 정도를 나타내는 파라미터이고 **a**의 값의 범위는 $0 \leq \mathbf{a} \leq 2$로 가정한다. 정당 0은 **a**의 값에 따라 유권자를 다음과 같이 차별한다. 우선, **a**=0이면 모든 유권자들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경우이다. 둘째, $0 < \mathbf{a} \leq 1$이면 [0, 1]의 구간에 분포된 모든 유권자들을 '다르게' 대우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정당 0은 정책 결정에 있어서 모든 유권자들의 후생 손실을 고려하지만, 0에 가까이 위치해 있는 유권자들을 좀 더 비중있게 고려하고 0에서 멀어질수록 고려의 정도가 감소한다.

셋째, $1 < \mathbf{a} \leq 2$인 경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을 고려한다. 첫째 가능성은 정당 0이 [0, $\frac{1}{a}$] 구간에 속해 있는 유권자들만을 고려하고 ($\frac{1}{a}$, 1] 구간에 속해 있는 유권자들은

정책 결정시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경우이다. 즉, 정당 0은 유권자들을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정당 0의 목적함수는 [0, $\frac{1}{a}$] 구간에 속해 있는 유권자들의 가중된 손실[3](weighted loss)을 합한 총손실을 극소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당 0은 ($\frac{1}{a}$, 1] 구간에 포함된 유권자들의 총손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정당 0은 ($\frac{1}{a}$, 1] 구간에 위치해 있는 유권자들, 즉 0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유권자들에 대해서는 정책 수립시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정당 0은 정책을 통해 이들의 후생을 증가시키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정치적 보복도 가하지 않는다. 실제로 정당은 극단적 유권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유권자 차별화 가중치가 1<**a**≤2인 경우의 두 번째 가능성은 정당 0이 정치적 이념이 유사한 유권자들의 손실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한 가중된 손실을 줄이려 하는 동시에 정치적 이념이 다른 유권자들이 입는 손해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합한 가중된 손실은 오히려 증가시키려 하는 것이다. 즉, 경쟁 정당(반대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유권자의 효용 감소가 정당 0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이제 유권자들의 차별 파라미터(**a**)값에 따라 네 가지 경우로 나누고, 각 경우의 정당의 최적 정책 선택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1. a = 0인 경우: 유권자 동등 대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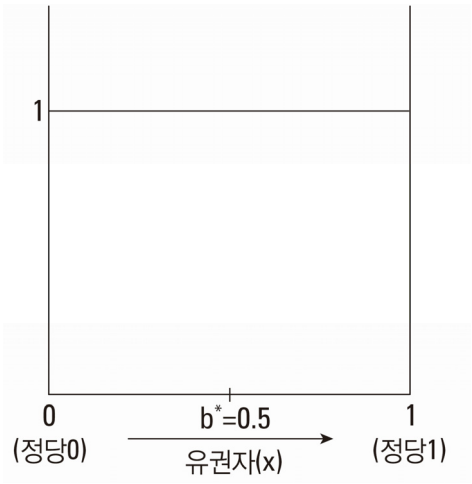
이 경우는 정당 0이 모든 유권자들을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처럼 '동등하게' 대우하는 경우이다. 정당 0이 정책 b를 선택했을 때 그로부터 각 유권자가 입는 손실(비효용)을 모두 합한 총손실을 f(b)로 나타내기로 한다. 총손실 f(b)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f(b) = \int_0^b (b-x)dx + \int_b^1 (x-b)dx = b^2 - b + \frac{1}{2}$$
$$= (b - \frac{1}{2})^2 + \frac{1}{4}. \qquad (1)$$

여기서 (b-x)와 (x-b)는 유권자들의 위치(즉, 유권자들의 유형)와 정당 0의 정책 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후생 손실을 나타낸다. 정당 0의 목적 함수는 유권자들의 후생 손실의 합을 극소화하는데 있다[4]. 따라서 a = 0일 때 유권자들의 총손실을 극소화하는 최적 정책은 (1)식의 1계 조건으로부터 $b^* = 1/2$임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유권자들이 [0, 1] 구간에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고, 정당 0이 모든 유권자들을 '동등하게' 대우(a=0)하는 경우 정당 0은 "**중위정책**"(median policy)을 선택하며, 이는 소위 '중위투표자'(m)가 선호하는 정책($b^m = 1/2$)과 일치하게 된다.

3) 유권자들이 정당의 정강 정책으로부터 얻는 후생에 '차별화 가중치'인 **a**를 곱한 것을 의미한다.
4) 즉, f(b)를 극소화하는 것이며, 1계 조건은 $\partial f(b)/\partial b = 0$이다.

<그림 1> 유권자들의 동등 대우 시 최적 정책 선택



2. 0<a≤1인 경우: 유권자 차별 대우

정당 0이 모든 유권자들에게 양(+)의 가중치(weight)를 부여하여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경우이다. 이를 위해 정당 0은 자신에 대한 지지도가 낮을수록, 즉 0에서 멀어질수록, 낮은 가중치를 부여한다. 아래 <그림 2>는 유권자 가중치가 0<a≤1인 경우 정당 0이 각 유권자에게 부여하는 가중치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2>에서 가로축은 [0, 1] 구간의 유권자를 나타내고, 세로축은 각 유권자의 손실에 정당 0이 부여하는 가중치의 값을 나타낸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정당 0의 목적함수는 각 유권자의 '**가중된 후생 손실'(weighted welfare loss)**을 합계한 후생 총손실을 나타내는 f(b)를 극소화하는 것이다. 이 경우 f(b)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f(b) = \int_0^b (b-x)(1-ax)dx + \int_b^1 (x-b)(1-ax)d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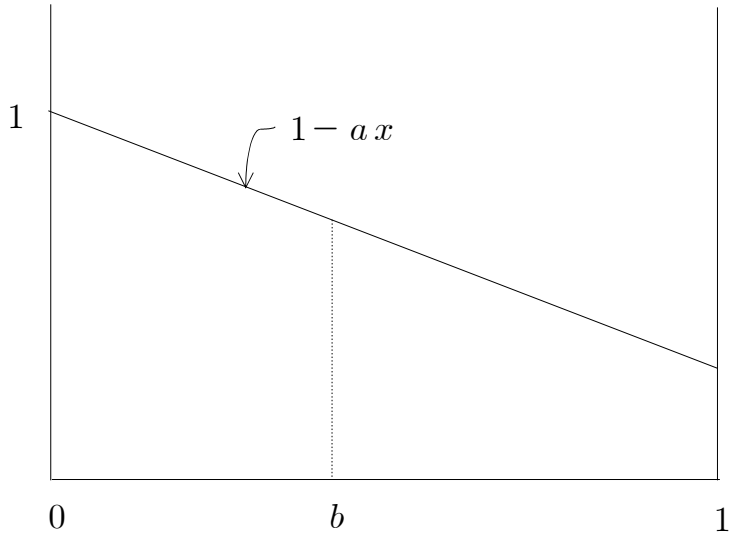
$$= -\frac{1}{3}ab^3 + b^2 + (\frac{a}{2} - 1)b + (\frac{1}{2} - \frac{a}{3}). \qquad (2)$$

정당 0이 f(b)를 극소화하는 최적 정책 b^*의 값은 극소화 1계 조건인 $f'(b) = -ab^2 + 2b + \frac{a}{2} - 1 = 0$의 식을 풀어 도출할 수 있다. 도출된 f'(b)는 b의 2차 함수이고, $f'(0) = \frac{a}{2} - 1 < 0$이다. 또한 2차 함수 f'(b)의 축의 식이 $\frac{1}{a}$이므로 방정식 f'(b) = 0의 '작은 근'은 0과 $\frac{1}{a}$사이의 값을 가진다. 따라서 f(b)는 방정식 f'(b) = 0의 작은 근의 값에서 극소화된다. 따라서 유권자들의 가중치가 0<a≤1일때 정당 0의 최적 정책

인 b^*는 다음과 같이 유도할 수 있다:

$$b^* = \frac{1}{a} - \sqrt{\frac{1}{a^2} - \frac{1}{a} + \frac{1}{2}} \qquad (0 < a \leq 1)$$

<그림 2> 유권자들의 가중치가 0<a≤1인 경우



3. 1<a≤2이며 [0, $\frac{1}{a}$]구간 유권자들만 고려하는 경우

<그림 3>은 유권자들의 가중치가 1<a≤2인 경우 정당 0이 [0, $\frac{1}{a}$] 구간에 분포된 각 유권자에게 부여하는 가중치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3>에서 가로축은 [0, $\frac{1}{a}$] 구간의 유권자를 나타내고, 세로축은 각 유권자의 손실에 정당 0이 부여하는 가중치의 값을 나타낸다. 정당 0은 정책 선택 시 [0, $\frac{1}{a}$] 구간에 속해 있는 유권자들의 가중 손실만 고려한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정당 0의 후생 총손실 함수인 f(b)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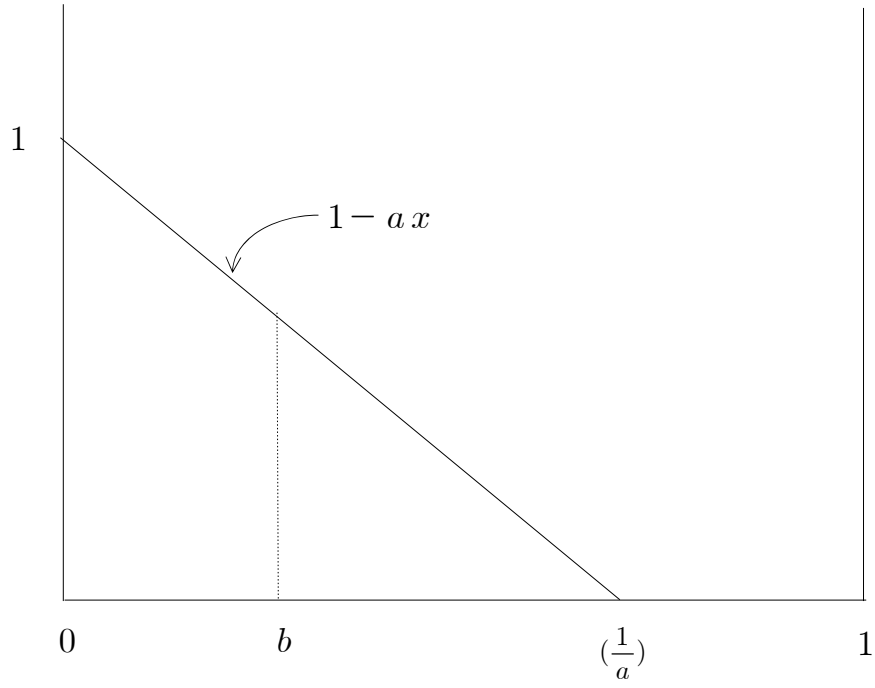
$$\begin{aligned} f(b) &= \int_0^b (b-x)(1-ax)dx + \int_b^{\frac{1}{a}} (x-b)(1-ax)dx \\ &= -\frac{1}{3}ab^3 + b^2 - \frac{b}{2a} + \frac{1}{6a^2}. \end{aligned} \qquad (3)$$

정당 0의 극소화 문제의 1계 조건은 $f'(b) = -ab^2 + 2b - \frac{1}{2a} = 0$으로 도출된다.

f'(0) = $-\frac{1}{2a}$ < 0이며 2차 함수 f'(b)의 축의 식이 $\frac{1}{a}$이므로 f'(b) = 0의 '작은 근'은 0과 $\frac{1}{a}$사이의 값을 가지며, 이 값에서 f(b)는 극소화된다. 따라서 유권자들의 가중치가 1<a≤2이며 [0, $\frac{1}{a}$] 구간의 유권자의 가중 손실만 고려하는 경우 정당 0의 최적 정책 b*는 다음과 같이 유도된다:

$$b^* = \frac{1}{a}(1 - \frac{1}{\sqrt{2}})$$

<그림 3> 유권자들의 가중치가 1<**a**≤2인 경우



이제까지 살펴본 세 가지 경우의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정치적 편향성에 따른 정책 편향성 정리를 도출할 수 있다.

<정리 1> 집권 정당 0은 유권자들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을 바탕으로 최적 정책을 차별적으로 선택한다고 하자. 유권자들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을 나타내는 가중치 a의 값에 따라 정당 0이 선택하는 최적 정책 b*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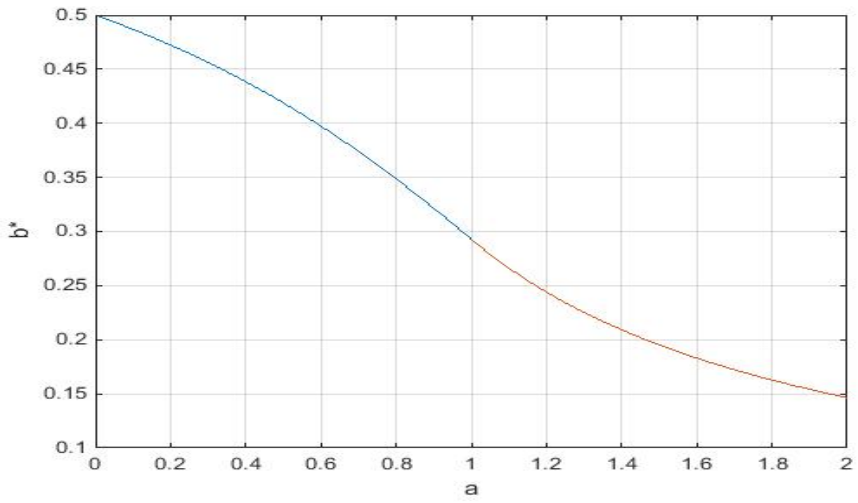
(1) **a**=0이면 최적 정책은 b* = 1/2이다.

(2) 0<**a**≤1이면 최적 정책은 $b^* = \frac{1}{a} - \sqrt{\frac{1}{a^2} - \frac{1}{a} + \frac{1}{2}}$

(3) 1<**a**≤2이고 [0, $\frac{1}{a}$] 구간의 유권자들만 고려한다면 $b^* = \frac{1}{a}(1 - \frac{1}{\sqrt{2}})$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유권자 차별화 가중치인 **a**의 값이 클수록 정당 0은 유권자들이 분포한 [0, 1] 구간에서 0에 가까이 위치한 유권자들을 **편애**하고, 0에서 멀리 떨어진 유권자들을 **덜 편애**한다. 극단적으로 ($\frac{1}{a}$, 1]의 구간에 속해 있는 유권자들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유권자 차별의 정도를 나타내는 가중치인 a**의 값이 커질수록 정당 0이 선택하는 정강 정책은 0에 가까워질 것이다. **a**의 증가는 정치적 편향성의 증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정치적 편향성이 커질수록 정당 0이 선택하는 정강 정책은 0에 가까워지며, 극단적으로 a = 2이면 $b^* \simeq 0.146$으로 주어진다. 반면에 정당 1의 경우에는 최적 정책이 1에 가까워질 것이며, 극단적으로는 0.854에 가까워질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정당의 정치적 편향성이 커질수록 정책의 변화가 큰 폭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극단적으로 양당제에서 정책은 0.146(정당 0의 최적 정책)에서 0.854(정당 1의 최적 정책) 범위 내에서 변화하는 것이다. 아래 <그림 4>는 정당 0이 유권자들을 차별하는 경우 정치적 편향성의 정도(**a**)와 선택된 최적 정책(b^*) 값 간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4> 정치적 편향성(**a**)과 정책 편향성(b^*) 간의 시뮬레이션



<그림 4>에서 보듯이 정당 0이 자신의 지지자와 비(非)지지자에 대한 차별의 정도가 커질수록, 즉 **a**의 값이 증가할수록, 0에 가까운 정책을 선택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정당이 지닌 "정치적 편향성"은 결국 "정책 편향성"으로 연결되는(mapping) 것이다.

4. 1<a≤2이고 비(非)지지자에게 보복하는 경우

이제까지 정당 0은 유권자들을 단순히 편애하거나 무관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러나 정당 0은 자신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후생 손실을 줄이려 하는 동시에 자신의 정치적 이념에 동조하지 않는 유권자들의 후생을 감소시키려 시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 0은 정치적 이념이 유사한 유권자들의 후생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념이 다른 유권자들이 입는 손해를 즐길 수도 있다! 즉, 경쟁 정당(반대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유권자의 효용 감소가 정당 0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이 경우 정당 0의 목적함수는 다음 식과 같이 주어진다. 이러한 경우에 정당 0이 극소화하고자 하는 f(b)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f(b) = \int_0^b (b-x)(1-ax)dx + \int_b^{\frac{1}{a}} (x-b)(1-ax)dx + \int_{\frac{1}{a}}^1 (x-b)(1-ax)dx \qquad (4)$$

$$= \int_0^b (b-x)(1-ax)dx + \int_b^1 (x-b)(1-ax)dx \qquad (4)'$$

(4)식의 우변의 세 번째 항은 (1 − *ax*) < 0이므로 음(-)의 값을 갖는다. 즉, [$\frac{1}{a}$, 1]의 구간에 속해 있는 유권자 x는 정당 0이 선택한 정책 b로부터 (x-b)의 후생 손실을 입는다. 정당 0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의 후생 손실을 좋아하며, 이는 정당 0의 **손실 감소**로 나타난다. 즉, [$\frac{1}{a}$, 1]의 구간에 속한 유권자 x가 보는 후생 손실 (x-b)에 음(-)의 가중치 (1-**a**x)를 곱한 (x-b)(1-**a**x)의 값도 음의 값을 가지며, 이는 정당 0의 **총손실**을 감소시키게 됨을 의미한다. 유권자 x가 1에 가까울수록 (1-**a**x)의 절대값이 커진다. 따라서 유권자들의 정당 0에 대한 지지도가 낮아질수록 이들의 손실이 더 큰 가중치를 가지고 정당 0의 손실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정당 0이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에게 일종의 '보복 심리'를 가지고 정책을 선택하는 경우에 정당 0의 목적함수는 정치적 편향성이 작아서 모든 유권자들을 고려하는 경우, 즉 **a**<1인 경우의 목적함수(즉, (2)식)와 '같아지게' 된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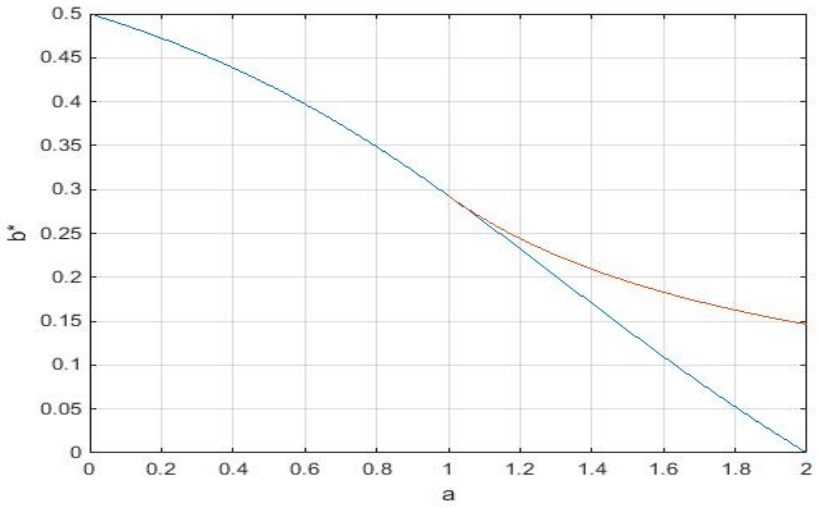
(4)′으로 표현된 정당 0의 f(b) 극소화 문제에 대한 1계 조건을 풀면 다음과 같이 최적 정책(b^*)을 구할 수 있다:

$$b^* = \frac{1}{a} - \sqrt{\frac{1}{a^2} - \frac{1}{a} + \frac{1}{2}} \qquad (1 < a \leq 2)$$

<그림 5>는 제II장에서 분석한 네 가지 경우를 합쳐서 나타낸 것이다. 우선, 유권자 차별화 가중치가 0≤a≤1인 경우는 <그림 4>의 경우와 동일하다(이는 그림에서 '아래

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다음으로, 1<a≤2 구간의 경우 정당 0이 [0, $\frac{1}{a}$] 구간의 유권자들만 고려하는 경우의 최적 정책 b^*는 해당 구간의 두 그래프 중 '위'의 그래프에 해당하며, 이 경우 또한 <그림 4>의 경우와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정당 0이 [$\frac{1}{a}$, 1] 구간의 유권자들에 대해 보복 심리를 가지고 최적 정책을 선택하는 경우의 최적 정책 b^*를 보여주는 그래프는 해당 구간의 두 그래프 중 '아래선'에 해당된다. 극단적으로 a = 2인 경우에는 정당 0은 b^* = 0인 최적 정책을 선택한다. 이러한 극단적 정책 선택으로 자신의 지지자들이 후생 손실를 입을 수 있지만, 비(非)지지자들은 더 큰 손실를 입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당 0은 비(非)지지자들을 보복할 목적으로 극단적 정책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림 5> 정치적 편향성(**a**)과 정책 편향성(b^*)의 관계: 0≤a≤2인 경우



지금까지의 분석은 정당 0을 중심으로 정당 0의 정치적 편향성(**a**)과 정책 편향성(b^*) 간의 상관관계를 논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정당 1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두 정당이 지지자들과 비(非)지지자들에 대한 차별의 정도가 심할수록 정책의 스윙(swing)이 더 커지게 될 것이다. 특히 세 번째 경우의 정당 0의 최적 정책인 b^*에 대한 시뮬레이션 값이 0.15~0.85의 범위에서 크게 변동함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정책의 양극화**'를 통해 정책의 안정성이 크게 저해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극단적으로 네 번째 경우에는 최적 정책에 대한 시뮬레이션 값이 0과 1의 범위에서 크게 변동한다. 물론 두 정당이 모든 유권자들을 동등하게 대우한다면 중위값(즉, 0.5)에 해당하는 최적 정책(즉, '중위정책')이 선택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이제까지의 논의를 다음 <표 1>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1> 유권자들의 정치적 편향성과 정당의 정책 편향성

유권자들의 차별화 가중치	최적 정책
모든 유권자들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경우	중위정책 선택
지지자들을 편애하고, 비(非)지지자들의 후생에는 무관심한 경우	정책 편향성 발생: 포퓰리즘 정책 선택
지지자들을 편애하지만 비(非)지지자들에게 보복을 가하는 경우	정책 편향성 발생: 보복 정책 선택

III. 기본 모형의 확장: 비선형 후생 손실과 일반적 유권자 분포

제II장은 유권자들이 [0, 1] 구간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하였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가정을 완화하여 유권자들이 '일반적으로'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하여 분석해 보기로 한다.[5] 우선, 유권자들의 정치적 유형을 나타내는 x의 밀도함수(density function)를 f(x)로 표기하기로 한다. 따라서 $\int_0^1 f(x)dx = 1$이다. 다음으로, 유권자들의 유형(x)의 평균을 $\int_0^1 xf(x)dx \equiv$ m으로 표기하며, 분산(s^2)은 다음과 같다:

$$s^2 \equiv \int_0^1 (x-m)^2 f(x)dx = \int_0^1 x^2 f(x)dx - 2m\int_0^1 xf(x)dx + m^2\int_0^1 f(x)dx$$
$$= \int_0^1 x^2 f(x)dx - m^2.$$

또한 유권자의 유형 x와 정책 b와의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후생 손실은 2차식으로서 $(b-x)^2$라고 가정한다. 마지막으로, 선거에서 승리한 정치인(정당)은 유권자들을 차별하지 않는 가운데 이들의 후생 총손실을 극소화하려 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에서 정치인(정당)의 목적함수인 후생 총손실(f(b))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f(b) = \int_0^1 (b-x)^2 f(x)dx = \int_0^1 b^2 f(x)dx - \int_0^1 2bxf(x)dx + \int_0^1 x^2 f(x)dx$$

$$= b^2 - 2bm + s^2 + m^2 = (b-m)^2 + s^2 \qquad (5)$$

이제 (5)식으로부터 후생 총손실을 극소화하는 최적 정책을 도출할 수 있다. 유권자들의 유형(x)과 정당의 정책(b) 간의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후생 총손실은 최적 정책(b^*)이 평균값(m)을 가질 때 극소값을 가질 것이다. 또한 유권자들이 분산되어 있는 정도

5) 따라서 이하의 분석에서는 유권자들의 분포에 있어서 하한과 상한을 각각 0과 1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 다만 제II장의 분석과 연결성을 가지기 위해 유권자들이 [0, 1] 구간에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가 클수록, 즉 s^2이 클수록, 정책에 따른 유권자들의 후생 손실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포용적인(encompassing) 정치인(정당)은 유권자들의 후생 손실의 극소화를 위해 "**유권자 평균**"(m)에 가까운 정책(b^*=m)을 선택할 것이다. 이를 "**평균정책**"(mean policy)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러한 결과는 정책의 우(右)편향성(right-wing bias) 또는 좌(左)편향성(left-wing bias)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왜 그런가? 많은 분포들의 경우(예를 들면, 소득 분포)에 유권자 분포는 평균값(mean)이 중위값(median)보다 더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평균값이 중위값보다 더 크기 때문에 포용적인 정치인(정당)은 중위값보다 "**평균값에 가까운 정책**"을 선택하려 할 것이다. 이를 중위투표자의 관점에서 보면 '**우(右)편향적인 정책**'이 된다. 물론 이와 정반대의 경우에는 '**좌(左)편향적인 정책**'으로 인식될 것이다.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유권자들의 분포에서는 보통 평균값과 중위값이 다르기 마련이다. 모든 유권자들을 평등하게 취급하고 유권자들의 총손실을 극소화하려는 정당은 '중위정책'(median policy)보다는 "평균정책"(mean policy)을 선택하려 할 것이다. 이는 중위투표자가 선호하는 정책과 정당이 선택하는 정책의 차이를 초래한다. 따라서 '포용적인' 정당(encompassing party)은 '우(右) 또는 좌(左) 편향적인 정책'을 선택하려는 유인을 가질 것이다. 이는 중위투표자 정리가 현실에서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V. 유권자의 체계적 편향성과 정책 선호

투표자들은 경제문제들에 대해 투표할 때 실제로 정책 편향성을 가지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이다. 왜 그런가? 투표자들은 투표 시에 '합리적으로 무지'(rational ignorance)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실수'를 저지르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에서 복잡한 경제문제들에 관한 투표자들의 믿음은 주로 자신의 경제적 지식이 아니라 '정치적 이념이나 믿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제문제들의 경우에 투표자들은 종종 '정치적 편향성'에 의거하여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체계적 실수"(systematic errors)를 저지르게 된다. 캐플란(B. Caplan, 2007)은 일반 대중들(또는 투표자들)이 경제문제와 관련하여 '체계적으로 실수하는 분야'로 다음 네 가지를 들었다[6]. 첫째, 일반 대중들은 시장기구가 수행하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의 역할이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사적 탐욕과 공적 이익의 조화 기능 등에 관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 대중들은 시장경제의 역할을 과소평가하거나 불신하게 된다. 캐플란(B. Caplan)은 이를 '반(反)시장 편향성'(anti-market bias)이라고 불렀다. 이는 일반 대중들이 '시장경제의 기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을 말한다. 둘째, 일반 대중들은 국제무역을 통해 얻는 무역이익을 과

6) Caplan(2007), pp. 9-11.

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일반 대중들은 국제무역이 자국의 경제번영에 미치는 기여를 과소평가하게 된다. 캐플란은 이를 '반(反)외국 또는 반(反)무역 편향성'(anti-foreign or anti-trade bias)이라고 불렀다. 이는 일반 대중들이 '국제무역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말한다. 셋째, 일반 대중들은 경제번영을 생산(production)이 아니라 '고용'(employment)과 동일시하고 있다. 캐플란은 이를 '인위적이며 불필요한 일자리 창출 편향성'(make-work bias)이라 불렀다. 이는 일반 대중들이 '생산보다는 고용을 중시하는 경향'(즉, '인위적 고용창출 편향성', '반(反)성장 편향성', 또는 '친(親)고용 편향성')을 말한다. 넷째, 일반 대중들은 현재의 경제적 사정이 대체로 나쁘며, 또한 미래에 더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 캐플란은 이를 '비관주의, 또는 반(反)낙관주의 편향성'(pessimistic or anti-optimistic bias)이라고 불렀다. 이는 일반 대중들이 '경제적 사정을 낙관적으로 보기보다 비관적으로 보는 경향'을 말한다. 문제는 일반 대중들(투표자들)이 이러한 네 가지 편향성들을 임의적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러한 편향성들은 일반 대중들(투표자들)을 '비합리적으로 행동'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실패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만약 투표자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자신의 선호를 매우 '잘못된 인식이나 믿음'을 바탕으로 결정한다면 정부는 정부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이다. 투표자들이 잘못된 믿음이나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경제정책이 어떻게 왜곡되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이를 위해 다음을 가정해 보기로 하자. 우선, 두 명의 후보자가 있으며, 각 후보자는 보호무역의 정도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position)을 가지고 경쟁한다고 가정한다. 다음으로, 투표자들은 두 가지 유형의 실수를 저지른다고 가정한다. 즉, 투표자들은 '임의적(random)으로'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고, 또는 '체계적(systematic)으로' 실수를 저지른다고 가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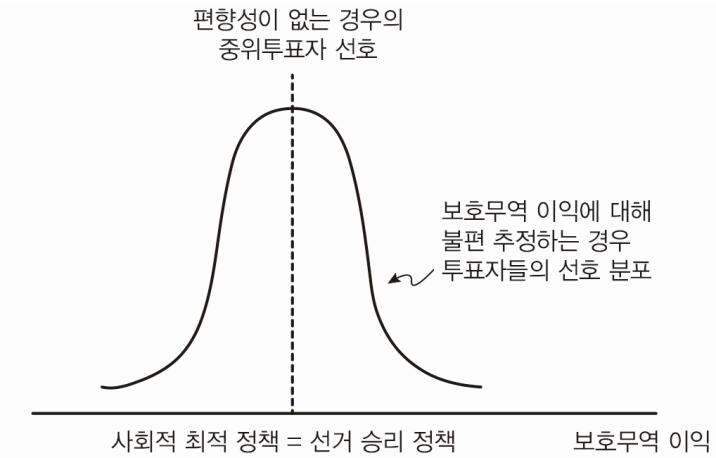
먼저, 투표자들이 '임의적으로 실수(random error)하는 경우'(즉, 편향성이 없는 경우)를 고려해 보자. 투표자들이 보호무역의 효과에 대해 임의적으로 실수하는(즉, '보호무역이 더 좋다'라고 인식하는) 경우 자유무역을 선호하는 '일부' 투표자들이 실수로 보호무역에 찬성 투표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임의적 실수로 인해 자유무역을 선호하는 '일부' 투표자들이 보호무역을 찬성하는 쪽으로 지지하게 된다. 그 결과 보호무역이 무지한 투표자로부터 과반수의 지지를 얻게 됨으로써 승리하게 된다. 이를 "투표합산의 기적"(Miracle of Aggregation)이라고 부른다[7]. 그러나 이러한 논리는 반대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즉, 투표자들이 자유무역의 효과에 대해 임의적으로 실수하는(즉, '자유무역이 더 좋다'라고 인식하는) 경우 보호무역을 선호하는 '일부' 투표자들이 자유무역에 찬성 투표함으로써 자유무역이 무지한 투표자로부터 과반수의 지지를 얻게 됨으로써 승리하게 된다.

다음 [그림 6]은 보호무역으로부터 얻는 이익에 대해 투표자들이 '임의적으로 실수하는'(즉, '편향성이 없는') 경우의 중위투표자(median voter)의 정책 선호를 보여 주고 있다. 이 경우에는 '투표합산의 기적'이 성립한다. 즉, 투표자들의 무지와 임의적

7) 이에 대해서는 Caplan(2007), pp. 6-9을 참고하기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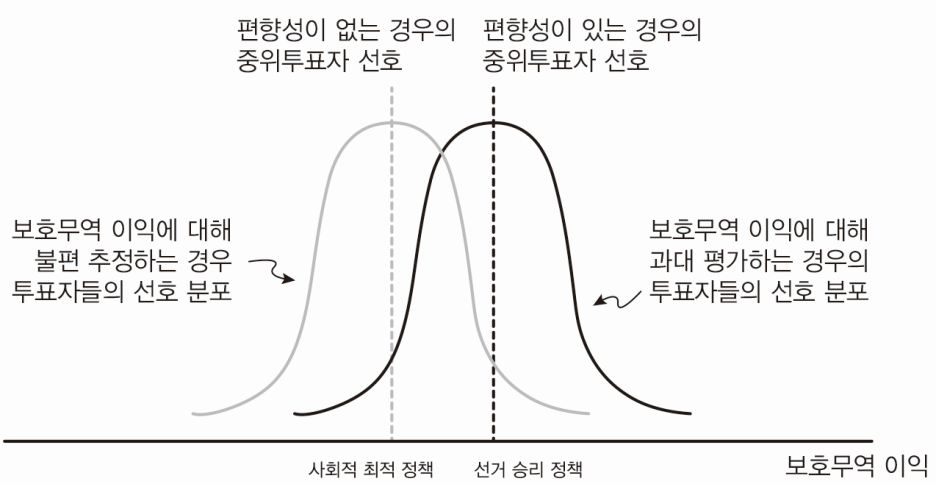
실수에 힘입어 보호무역이 승리하게 된다. 따라서 '선거에서 이기는 정책'(election winning platform)이 '사회적 최적 정책'(socially optimal platform)과 일치한다.

<그림 6> 투표자들의 '임의적 실수'가 있는 경우 중위투표자의 정책 선호



다음으로, 투표자들이 '체계적으로' 실수하는(즉, '편향성이 있는') 경우를 고려해 보자. 예를 들면, 투표자들이 보호무역이 가져다주는 이익에 대해 '체계적으로 과대 평가한다'(즉, 보호무역 편향성)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가? 자유무역을 선호하는 '많은' 투표자들은 편향성(체계적 실수)으로 인해 보호무역에 찬성 투표할 것이고, 보호무역을 선호하는 투표자들은 소수만이 자유무역에 찬성 투표할 것이다. 그 결과 보호무역이 투표자들로부터 압도적 찬성을 얻을 것이다. 다음 [그림 7]은 투표자들의 '체계적 실수'가 있는 경우 중위투표자의 상이한 정책 선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정치적 선호가 '사회적 최적 정책'(social optimal platform)에서 벗어나 보호무역 쪽으로 편향되어 있다. 즉, '선거에서 이기는 정책'이 보호무역 쪽으로 치우치게 되며, 그로 인해 '선거에서 이기는 정책'이 '사회적 최적 정책'과 불일치하게 된다. 이 경우 중위투표자들은 일반 투표자들의 편향성 때문에 원하지 않는 '과도한' 보호무역 하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중위투표자들은 보호무역이 감소하면 자신의 후생이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최적인 정책'이 아니라 "편향된(체계적으로 실수하는) 투표자들이 원하는 정책"을 선택하게 된다. 결국 투표자들의 보호무역에 대한 '편향성'과 '체계적 실수'로 인해 정치인들은 사회적 최적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보호무역' 정책으로 이들의 요구에 부응 또는 영합(迎合)하게 된다.

<그림 7> 투표자들의 '체계적 실수'가 있는 경우 중위투표자의 정책 선호



V. 결론

양당제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두 정당이 집권을 목적으로 정책 선택 경쟁을 한다. 이 과정에서 각 정당은 유권자들을 '차별화'하려는 강한 유인을 가진다. 각 정당은 자신의 정치적 이념에 기반하거나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을 선택하여 실시하려 할 것이다. 또한 각 정당은 자신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편애'하지만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에게는 무관심할 것이다. 극단적으로 각 정당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에게 '보복'을 가할 수도 있다. 이러한 유권자들의 차별화는 '정책 편향성'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유권자들의 정치적 편향성과 정당의 정책 편향성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동안 널리 인정되어 온 중위투표자 정리에 따르면 양당제 하에서 정당은 더 많은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해 중위투표자들의 선호에 부합하는 정책을 선택한다. 이 경우 각 정당의 정책은 거의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당은 정치철학이나 이념면에서 큰 차이가 있으며, 유권자들도 정책 선호도 서로 다르다. 따라서 실제 정치에서 정당은 정책 선택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다양한 정책 선호(policy preference)를 분명히 반영하여, 그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을 선택할 것이다.

본 논문은 유권자들의 '정치적 편향성'이 정당의 '정책 편향성'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이론적 모형과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였다. 유권자들의 차별화 유형(즉, 정치적 편향성)을 네 가지로 분류하여 각 경우에 정당 0이 선택하는 최적 정책을 살펴 본 결과 세 가지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정치적 편향성이 클수록 정책 편향성이 크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둘째, 유권자 차별화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정책 편향성이 나타났다. 정당은 자신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편애하기 위해 또는

비(非)지지자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보복하기 위해 중위 정책, 포퓰리즘 정책, 보복 정책 등을 통해 차별적으로 대우하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포용적인(encompassing) 정치인이나 정당의 발생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포용적인 정치인(정당)은 유권자들의 후생 손실의 극소화를 위해 중위값보다 '평균값'에 가까운 정책, 즉, '평균 정책'을 선택하려 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개발된 모형을 활용하여 흥미 있는 추가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정책편향성(b^*의 값)을 추정할 수 있다. 추정된 b^*의 값은 바로 정치적 편향성($\mathbf{a}$의 값)의 정도를 제시해 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양당제 체제를 유지하면서 정권교체를 경험한 한국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함으로써 한국의 역대 정권의 정치적 편향성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양당제 체제를 유지하는 미국 등과 비교함으로써 정치적 편향성의 국제비교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의 정치적 편향성의 발생원인에 대해서도 추가적 분석이 필요하다. 제IV장에서 언급했듯이 유권자들은 자신의 합리적 무지(rational ignorance)나 비합리성(irrationality)으로 인해 정치적 편향성에 의존하여 지지 정당을 선택할 수 있다. 전자의 요인보다 후자의 경우 정책 편향성이 더 클 것이다. 또한 유권자들을 유식한(informed) 유권자들과 무지한(uninformed) 유권자들로 나눈다면 후자의 경우 전자보다 정책 편향성이 더 클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추후 연구 과제로 남겨 둔다.

<참고문헌>

Alesina, A. (1988), "Credibility and Policy Convergence in a Two-Party System with Rational Voter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78, No. 4, pp. 796~805.

Baron, David P. (1994). "Electoral Competition with Informed and Uninformed Voter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8, No. 1, pp. 33-47.

Caplan, B. (2007), *The Myth of the Rational Voter: Why Democracies Choose Bad Polici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Caplan, B. (2002), "Systematically Biased Beliefs about Economics: Robust Evidence of Judgemental Anomalies from the Survey of Americans and Economists on the Economy", *Economic Journal*, Vol. 112, pp. 433-58.

Downs, A. (1957),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Harper & Row.

Hotelling, H. (1929), "Stability in competition", *Economic Journal*, Vol. 39, No. 153, pp. 41~57.

Ledyard, J. (1984), "The Pure Theory of Large Two-Candidate Elections",

Public Choice, Vol. 48, pp. 7~41.

Lee, D. S., E. Moretti and M. J. Butler (2004), "Do voters affect or elect policies?: evidence from the U. S. Hous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9, No. 3, pp. 807~859.

Lee, Sung-Kyu (2006), "Political Optimal Tax Policy Making in a Probabilistic Voting Framework", *Korean Economic Review*, Vol. 22, No. 1, pp. 99~130.

Nordin, M. (2014), "Do Voters Vote in Line with their Policy Preferences? - The Role of Information", *CESifo Economic Studies*, Vol. 60, No. 4, pp. 681~721.

Abstract

Political Bias and Policy Bias under Two-Party System:
Mapping voters' discrimination into biased policy via median policy, populist policy, retaliatory policy and mean policy

Sanghack Lee and Sungkyu Lee
(Kookmin University and Andong National University)

In a representative democracy, two parties compete, on the one hand, to adopt policy which voters favored to gain power in the national election. On the other hand, the winning or ruling party has an incentive to *discriminate* voters depending upon there degree of support for the party. In doing so, each party will favor its supports, but has an indifference in or even retaliate its opponents. Thus, there is an important relation between the extent of voter discrimination and policy bias. Incorporating explicitly the type of voters' differentiation by the winning party into the model, we attempt to examine the *mapping* process connecting from the 'political bias' to the 'policy bias' under two-party system. The outcome of the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larger the political bias, the greater the policy bias. This implies that the winning party will cater to voter's preference by delivering their favored policy. Second, there are various *biased* policies the winning party adopts so as to discriminate voters, such as median, populist, and even retaliatory policies. Finally, the *encompassing* politicians or party have an incentive to choose 'mean policy' which has more voters than median policy.

Key words: Two-party system, Median-voter theorem,
Type of voters' differentiation, Weighted welfare function,
Political bias, Policy bias, Median policy, Populist policy,
Retaliatory policy, Mean policy, Encompassing party.